

01. ② 02. ③ 03. ④ 04. ② 05. ③ 06. ④ 07. ⑤ 08. ④ 09. ① 10. ①
11. ③ 12. ② 13. ⑤ 14. ⑤ 15. ① 16. ① 17. ④ 18. ③ 19. ④ 20. ⑤

1.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

정답 해설: A는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B는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②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한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
- ③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과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모두 정부의 재해 복구 지원금 집행을 정치로 본다.
- ④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른 사회 집단의 활동과 구별되는 국가 활동의 특수성을 인정한다.
- ⑤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학급 구성원이 체육 대회 단체복 디자인을 결정하는 활동을 정치로 보지 않는다.

2. 법치주의의 유형 이해

정답 해설: A는 형식적 법치주의, B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③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는 모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률에 근거할 것을 요구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는 모두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통치 권력이 행사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 ② 실질적 법치주의는 위헌 법률 심사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④ 형식적 법치주의와 달리 실질적 법치주의는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막기 위해 법의 목적과 내용이 모두 정의로워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 ⑤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의 실질적 정당성과 절차적 합법성을 모두 강조한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나)에 들어갈 수 없다.

3.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이해

정답 해설: A는 복지 국가의 원리이고, B는 국제 평화주의이다. ④ 국가가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기 위해 경제 질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하는 근거가 되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는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국가 권력이 창설되어야 한다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는 국민 주권주의이다.
- ② 복수 정당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은 국민 주권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 ③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는 모두 헌법의 이념적 기초이자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 원리이다.
- ⑤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것은 국제 평화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4.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

정답 해설: ㉠은 주민 투표, ㉡은 주민 소환이다. 우리나라 지방 자치 단체 기관 중 A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장, B는 지방 의회이다. ㉢ 지방 의회는 지방 자치 단체의 행정 사무에 대한 감사권을 가진다. **정답 ㉢**

[오답피하기]

- ①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③ 지방 의회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 편성한 지방 자치 단체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 ④ 지방 의회는 조례 제정권,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규칙 제정권을 갖는다.
- ⑤ ㉠은 주민 투표이고, ㉡은 주민 소환이다.

5. 우리나라 헌법 기관의 이해

정답 해설: 우리나라 헌법 기관 중 A는 국회, B는 대통령, C는 국무총리, D는 대법원, E는 헌법 재판소이다. ㉢ 국회는 대통령에게 국무총리의 해임을 건의할 권한을 가진다. **정답 ㉢**

[오답피하기]

- ①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의 제소에 따라 헌법 재판소가 정당의 해산 여부를 결정한다.
- ② 국무총리는 국무 회의의 부의장이다.
- ④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 재판소장을 임명한다.
- ⑤ 헌법 재판소는 권한 쟁의 심판을 통해 국회와 대통령 상호 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한 다툼을 심판한다.

6. 기본권 유형 이해

정답 해설: A는 평등권이다. ㉣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는 평등권이다. **정답 ㉣**

[오답피하기]

- ①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을 배제하는 방어적 권리는 자유권이다.

- ② 국민이 국가 기관의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참정권이다.
- ③ 다른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구제받기 위한 절차적 권리는 청구권이다.
- ⑤ 평등권은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를 준수하면 제한될 수 있는 권리이다.

7. 정치 참여 집단 이해

정답 해설: A는 정당, B는 이익 집단, C는 시민 단체이다. ⑤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조직된 정치 참여 집단은 정당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는 모두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
- ② 정치적 책임을 지는 정치 참여 집단은 정당이다.
- ③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는 모두 정책 결정 기구가 아니다.
- ④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는 모두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기능을 한다.

8. 가족 관계와 법 이해

정답 해설: ④ 병과 A는 친자 관계에 있다. 따라서 병과 정의 법률혼을 통해 정은 A의 친족이 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부부가 이혼 시 양육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 ② 을의 사망 당시 A는 친양자로 입양되었으므로 을과의 친자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갑과 A는 모두 을의 사망 당시 을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 ③ 협의상 이혼의 효력은 행정 관청에 이혼 신고를 한 때에 발생하므로 면접 교섭권도 이때부터 인정된다.
- ⑤ B는 미성년자가 아니므로 부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다.

9. 특수 불법 행위 이해

정답 해설: ① 사용자 갑은 피용자인 병의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무에 대해 사용자로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공작물 소유자 을은 공작물 점유자가 면책되면 무과실 책임을 지게 된다.
- ③ 갑과 병은 침팬지 관리를 담당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침팬지를 잃어버리게 된 병은 갑에 대해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 ④ 무는 책임 능력이 있으므로 정은 갑에 대해 감독 의무자로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⑤ 무는 책임 능력이 있으므로 무는 갑에 대해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10. 국제법의 법원(法源) 이해

정답 해설: 국제법의 법원(法源) 중 A는 조약, B는 국제 관습법이다. ㄱ. 조약은 국가 뿐 아니라 국제기구도 체결 당사자가 될 수 있다. ㄴ.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체결·비준한 조약보다 헌법이 우위에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ㄷ. 신의 성실의 원칙과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은 국제법의 법원(法源) 중 법의 일반 원칙의 예이다.

ㄹ.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국들이 합의하여 분쟁 해결을 요청한 사건에 대해서만 국제사법 재판소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11. 민법의 기본 원칙 이해

정답 해설: A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다. ③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개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타인과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② 소유권 절대의 원칙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④ 계약 공정의 원칙에 대한 내용이다.

⑤ 과실 책임의 원칙에 대한 내용이다.

12. 헌법 재판소의 권한 이해

정답 해설: A는 위헌 법률 심판, B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 C는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②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근거를 둔 명령이나 규칙은 위헌 법률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명령이나 규칙의 위헌성, 위법성에 대한 최종 심사권은 대법원의 권한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A는 위헌 법률 심판이다.

③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없다.

④ 헌법 소원 심판은 국민이 청구권자이다.

⑤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과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은 모두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견제 수단이 된다.

13. 형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호 제도 이해

정답 해설: ⑤ 형사 보상은 유죄 판결 시에는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구속 적부 심사는 피의자 측이 청구하는 것이지 검사가 청구하는 것이 아니다.

② 피의자는 기소 이전 수사 단계에서도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③ 유예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공소 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판

결은 선고 유예이다.

④ 배상 명령 제도는 민사 재판이 아닌 형사 재판에서 활용할 수 있다.

14. 선거 결과 분석

정답 해설: 제시된 자료를 토대로 갑국, 을국의 선거 결과를 나타내면 표와 같다.

구분		갑국			을국		
		A당	B당	C당	X당	Y당	Z당
t 시기	지역구 의석수(석)	10	4	6	5	3	2
	비례 대표 의석수(석)	6	2	2	8	10	2
	전체 의석수(석)	16	6	8	13	13	4
t+1 시기	지역구 의석수(석)	5	2	3	0	0	0
	비례 대표 의석수(석)	9	6	5	9	18	3
	전체 의석수(석)	14	8	8	9	18	3

⑤ t+1 시기 을국 Y당의 의회 의석수는 18석이고, t 시기 갑국 B당의 의회 의석수는 6석이다. 따라서 t+1 시기 을국 Y당의 의회 의석수는 t 시기 갑국 B당의 의회 의석수의 3배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t 시기에 갑국에서는 10개의 지역구 선거구에서 20명의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므로 갑국의 지역구 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제이다. 을국에서는 10개의 지역구 선거구에서 10명의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므로 을국의 지역구 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이다. 동일 선거구 내 당선자 간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제이다.

② t+1 시기에 을국 X당의 의회 의석수는 9석이고, Z당의 의회 의석수는 3석이므로 두 정당의 의회 의석수는 12석으로 전체 의석수 30석의 과반이 되지 않는다.

③ t 시기에 비해 t+1 시기에 갑국 A당의 의회 의석수는 16석에서 14석으로 줄었고, C당의 의회 의석수는 8석으로 변함이 없다. 따라서 C당의 의회 의석률은 증가하지 않았다.

④ 을국은 t+1 시기에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지 않고 비례 대표 의원만 선출하므로 의회 의원의 지역 대표성이 t 시기에 비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15. 전형적인 정부 형태 이해

정답 해설: t 시기에 갑국은 A당이 16석으로 과반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이 C당이므로 갑국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고, 을국의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ㄱ. 의원 내각제에서 행정부는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ㄴ. 정

부 형태가 변경된 국가가 갑국이라면 t+1 시기에 갑국과 을국은 모두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이다. t+1 시기에 을국의 Y당은 과반 의석을 차지하였으므로 단독 내각이 구성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ㄷ. 정부 형태가 변경된 국가가 을국이라면 t+1 시기에 갑국과 을국은 모두 대통령제 정부 형태이다. 대통령제에서 행정부 수반은 법률안 제출권을 갖지 않는다.

ㄹ.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동일인인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t+1 시기에 갑국이 대통령제라면 을국의 정부 형태도 대통령제이다. 내각 불신임권은 의원 내각제의 특징이므로 t+1 시기에 을국의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없다.

16. 범죄의 성립 요건 이해

정답 해설: ① 갑의 행위는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나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 중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을의 행위는 심신 상실자의 행위로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 중 자구 행위이다.

③ 갑과 을의 행위는 모두 법률로 정해 놓은 범죄 행위 유형, 즉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④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 중 긴급 피난이다. 갑의 행위는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

⑤ 법적 비난 가능성은 책임을 의미한다. 을에게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17. 소년 사건 처리 이해

정답 해설: ㄴ. 형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연령은 14세 이상이다. 따라서 12세인 병과 달리 18세인 갑, 15세인 을은 형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ㄷ. 소년법상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되는 연령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이다. 따라서 갑, 을, 병은 모두 소년법상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ㄱ. 피고인과 검사는 피해자와 달리 형사 재판의 당사자이다.

18. 근로자의 권리 구제 절차 이해

정답 해설: 갑의 사례는 부당 해고 구제 절차, 을의 사례는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에 해당한다. ③ 부당 노동 행위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갑은 중앙 노동 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을 상대

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갑은 노동 위원회의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 지방 노동 위원회와 중앙 노동 위원회는 모두 갑에 대한 해고가 부당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⑤ □□ 지방 노동 위원회와 중앙 노동 위원회는 모두 을에 대한 전보 조치가 근로 3권을 침해한 부당 노동 행위라고 보았다.

19. 미성년자의 계약 이해

정답 해설: ④ 갑은 을에게 본인이 성년인 것처럼 사기를 쳐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을은 갑의 사기를 이유로 게임기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갑과 을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 표시인 청약과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 표시인 승낙을 하였으므로 게임기를 건네받기 전에 계약을 성립하였다.

②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하여 거래 상대방이 이를 믿게 한 후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법정 대리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③ 위조된 신분증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갑과 갑의 법정 대리인에게는 취소권이 없고,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취소권이 배제된 갑의 법정 대리인은 추인할 수 없으므로 을은 갑의 법정 대리인에게 추인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20.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정답 해설: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중 A는 총회이고, B는 안전 보장 이사회이다. ㄱ. 국제 연합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인 총회는 주권 평등의 원칙이 적용된다. ㄴ.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절차 사항을 제외한 모든 실질 사항에 대한 결정은 상임 이사국 전체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ㄷ. 총회와 안전 보장 이사회는 모두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관을 선출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ㄷ. 안전 보장 이사회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 군사적 강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